


# [기고] 유엔에 상설화된 북한 인권 조사위를 설치하자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업데이트 2026.02.10. 10:01 

---



오는 17일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회부할 것을 촉구한 지 정확히 12년째가 되는 날이다. 당시 북한 인권 COI 보고서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비록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아직도 담보 상태지만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이 전례 없이 공론화되는 효과를 냈다.

2013년 설치돼 1년간 활동한 북한 인권 COI는 유엔 책임 규명 기구 중에 특이한 사례다. 유엔은 전쟁, 학살 보도로 여론이 들끓으면 COI나 사실조사단(FFM)을 설치한다. 북한은 극도의 폐쇄성 탓에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감금과 같은 잔학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 그런데 2013년 인권 단체와 탈북민의 호소로 출범한 북한 인권 COI는 분위기를 일거에 바꿔 놓았다.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확인했고, 탈북민을 강제 복송하는 중국 관리가 북한 반인도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인권 COI 권고대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 사상 최초로 한·미·일 외교장관이 참석한 북한인권 고위급회의가 열린 데 이어 안보리에서도 수년간 북한 인권이 논의됐다. 이후 북한 당국의 폭행, 가혹 행위가 줄었다는 탈북민 진술이 있었다.

북한 인권 COI는 묻히기 쉬운 인권 참상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인권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 COI 보고서는 12년이 지나 기억에서 희미해졌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ICC 회부는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이라는 벽에 걸렸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한국 드라마 유포를 사형에 처하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드는 등 인권 역주행 중이다. 북한 인권 COI의 권고로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도 실망스럽다. 이곳에서 최근 낸 보고서는 탈북자 인신매매와 강제 복송 등을 설명하면서 중국 대신 ‘인접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탈북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라 불러 빈축을 샀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엔 인권 조사 기구가 증거를 수집해 향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북한 반인도 범죄 억지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면 북한 인권 COI를 다시 설치해 상설화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북한 인권 COI 보고서 이후 시리아 책임 규명 메커니즘(IIIM)과 미얀마 책임 규명 메커니즘(IIMM)이 설치됐고, 베네수엘라·이란·우크라이나 등에서 사실상 상설 조사 기구가 활동 중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이 나라들보다 나은가?

2002년 인류는 보편적 국제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해 ICC를 설립했다. ICC의 일원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상설 북한 인권 COI 출범에 앞장서야 한다. 매년 2월 17일을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해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다. 우리는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인권·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는 데 앞장서야 한다.

# Establish Permanent UN Human Rights Body for North Korea

Permanent UN body urged as North Korea abuses escalate, ICC referral stalls

By Song Sang-hyun Former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Updated 2026.02.10. 10:02 

---



The upcoming 17th marks exactly 12 years since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OI) confirmed that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urge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urity Council, to refer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t the time,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COI report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Security Council refer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lthough referring the North Korean situation to the ICC remains stalled,

the report had the effect of unprecedentedly bring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public discourse.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COI, established in 2013 and active for one year, is a unique case among UN accountability mechanisms. The UN establishes COIs or Fact-Finding Missions (FFMs) when public opinion erupts over reports of war or massacres. Due to North Korea's extreme secrecy, atrocities such as public executions and detention in political prison camps are difficult to expose externally. However,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COI, launched in 2013 following appeals from human rights groups and defectors, dramatically shifted the atmosphere. It confirmed that North Korea's widespread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ned that Chinese officials forcibly repatriating defectors could become accomplices to these crime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adopted resolutions urging the Security Council to refer the North Korean situation to the ICC as recommended by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COI. Following the first-ever high-level meeting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ttended by the foreign minister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history of the UN General Assembly, the Security Council discussed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 several years. Subsequently, there were testimonies from defectors indicating a reduction in violent and harsh acts by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COI presented an effective model for internationally exposing human rights atrocities that could easily be buried and improving human rights through this. However,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COI report has faded from memory after 12 years. The Security Council's referral of North Korea to the ICC has hit a wall due to vetoes from China and Russia. In the meantime, North Korea has been regressing in human rights, enacting the \*Anti-Reactionary Thought Culture Rejection Law\* that imposes the death penalty for spreading South Korean dramas. The UN Offi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established following the COI's recommendation, has also been disappointing. A recent report from this office drew criticism for using the term "neighboring countries" instead of "China" when explaining human trafficking and forced repatriation of defectors, and for referring to defectors as "persons who have lef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deter North Korea's crimes against humanity, a clear message must be sent that an independent and specialized UN human rights investigation body can collect evidence and hold perpetrators criminally accountable in the future. Therefore, to secure new momentum for deterring North Korea's crimes against humanity at this point, concrete efforts are needed to re-establish and institutionalize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COI. Since the 2014 North Korea Human Rights COI report,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Syria (IIIM) and Myanmar (IIMM) have been established, and de facto permanent investigation bodies are active in Venezuela, Iran, Ukraine, and elsewhere. Is the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etter than in these countries?

In 2002, humanity established the ICC to realize universal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a member of the ICC and a nation aspiring for unification, should take the lead in launching a permanent North Korea Human Rights COI. There is also a need to designate February 17th every year as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ancement Day" to rai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wareness. We must take the lead in spreading universal values such as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North Korea.

---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Upstage Solar AI.

[원문보기 \(View Original Korean Article\) !\[\]\(bd1a142de767a21e5362c595f844a4ff\_img.jpg\)](#)

# 유엔에 상설화된 북한 인권 조사위를 설치하자

## 기고

###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오는 17일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회부할 것을 촉구한 지 정확히 12년째가 되는 날이다. 당시 북한 인권 COI 보고서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비록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아직도 담보 상태지만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이 전례 없이 공론화되는 효과를 냈다.

2013년 설치돼 1년간 활동한 북한 인권 COI는 유엔 책임 규명 기구 중에 특이한

사례다. 유엔은 전쟁, 학살 보도로 여론이 들끓으면 COI나 사실조사단(FFM)을 설치한다. 북한은 극도의 폐쇄성 탓에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감금과 같은 잔학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 그런데 2013년 인권 단체와 탈북민의 호소로 출범한 북한 인권 COI는 분위기를 일거에 바꿔 놓았다.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확인했고, 탈북민을 강제 복송하는 중국 관리가 북한 반인도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인권 COI 권고대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 사상 최초로 한·미·일 외교장관이 참석한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안보리에서도 수년간 북한 인권이 논의됐다. 이후 북한 당국의 폭행, 가혹 행위가 줄었다는 탈북

민 진술이 있었다.

북한 인권 COI는 묻히기 쉬운 인권 참상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인권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 COI 보고서는 12년이 지나 기억에서 희미해졌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ICC 회부는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이라는 벽에 걸렸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한국 드라마 유포를 사형에 처하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드는 등 인권 역주행 중이다. 북한 인권 COI의 권고로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도 실망스럽다. 이곳에서 최근 낸 보고서는 탈북자 인신매매와 강제 복송 등을 설명하면서 중국 대신 ‘인접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탈북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라 불러 빈축을 샀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엔 인권 조사 기구가 증거를 수집해 향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명

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역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북한 반인도 범죄 억지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면 북한 인권 COI를 다시 설치해 상설화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북한 인권 COI 보고서 이후 시리아 책임 규명 메커니즘(IIIIM)과 미얀마 책임 규명 메커니즘(IIMM)이 설치됐고, 베네수엘라·이란·우크라이나 등에서 사실상 상설 조사 기구가 활동 중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이 나라들보다 나은가?

2002년 인류는 보편적 국제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해 ICC를 설립했다. ICC의 일원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상설 북한 인권 COI 출범에 앞장서야 한다. 매년 2월 17일을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해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다. 우리는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인권·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는 데 앞장서야 한다.